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교
http://www.dkc.ac.kr
정시1차모집
2011.12.22~2012.1.3 062)520-2555 동강대학교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 -5/1℃ 목포 -4/2℃ 여수 -3/2℃

단기 4344년 (음력 11월 2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131호 1판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지리산 4곳·월출산·설악산·한려해상

케이블카 논란 점화

환경부, 국립공원 7곳 후보지 결정…환경단체 반발

정부가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대상지는 구례군, 남원시 등 지리산권 4개 시·군을 포함 후보지 7곳에 대해 민간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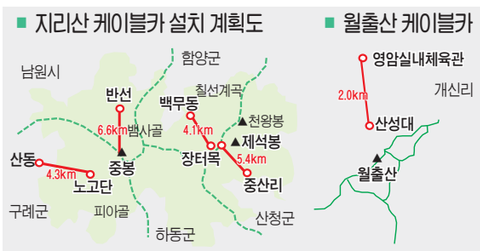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역관광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립공원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 간 마찰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2일 "지난 21일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절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차량을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케이블카를 말한다.

환경부는 애초 9개 국립공원 15개 지역을 케이블카 사업 후보지로 고려했지만 시범사업 검토대상을 현재까지 신청된 내륙형 6곳과 해상형 1곳 등 7곳(지리산 구례·남원·산청·함양, 월출산 영암, 설악산 양양, 한려해상 사천 지역)으로 제한했다.

노선 연장은 지리산 구례 4.3km, 남원 6.6km, 산청 5.4km, 함양 4.1km, 월출산 영암 2.0km, 설악산 양양 4.71km, 한려해상 사천 2.5km 등이다. 특히 내륙형 6곳 중 4곳이 지리산권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례군은 이미 산동면 좌사리 지리산 온천관광지구~노고단 아래 KBS 중계소 하단에 3년간 군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32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남원은 반선지구~중봉 하단부에 4년간 421억원을, 산청군은 중산관광지~제석봉 구간에 3년간 450억원을, 함양 역시 백무동~장터목대피소 하단에 5년간 2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은 영암실내체육관 인근에 들어설 기(氣)체육공원~월출산 지봉(산성대) 구간에 군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200억원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환경성, 경제성, 공공성, 기술성 등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차후 개최될 국립공원위원회에 위임할 예정이며, 23일 7개 지자체의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10명 이내 전문가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검토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 후보지에 대해 정밀검토에 나서기로 했으며 경제성 검증기관으로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환경성, 현지조사,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의견 등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최종 시범대상사업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지리산종교연대 등이 지금까지 산림훼손이 우려돼 개발보다는 보전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7개 대상지가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내복입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공공기관들이 난방제한 등 에너지 절감에 나선 가운데 22일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서 내복을 입은 구청 공무원들이 '내복 입고 따뜻한 겨울나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北 '김정은 시대' 공식 선언

'김정일 유훈통치' 시사…대화기조 유지될 듯

북한은 22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혁명위업의 계승자·인민의 영도자'로 명시,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5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라는 장문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담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22일자 1면 전면에 이 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이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그 이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유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위원장이 당분간 '유훈통치'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혀 김 부위원장도 김 위원장이 내세웠던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다른 유훈으로 조국통일을 언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인민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해 김 위원장이 추진해온 대외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한의 새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미국 백악관은 21일 "김정은 후계 구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김정은을 공식 거명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통합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의결정족수 미달 근거 없어"

민주당 내 통합안을 반대하는 원외 지역위원장 10명이 낸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통합당은 통합 절차의 법적인 정당성을 획득해 지도부 선출 과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통합결의에 대해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인 박모씨 등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대의원대회에 참가해 등록한 대의원이 5820명이 아니라거나 그보다 적은 수만 회의장에 남아있었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가 출석수보다 적다고 실제로 적은 수만 출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합당 같은 중대한 문제 역시 정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결의할 당시 회의장에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구성원 1만562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투표한 수도 5067명에 그치는 등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의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北 적대시 안해…체제 안정되길" 李대통령-여야대표 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고, 4강 국가와 잘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모두 북한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면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중국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내년에 중국에 첫 국빈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우리와 중국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가 민화협 차원의 민간 조문단 파견을 요구한데 대해 "원칙이 훼손된다면 곤란하다"면서 "뜻은 충분히 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1년 뜬 별 진 별 ▶17면

광신대학교
2012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입학문의 (062) 605-1114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6(월)
입학문의 (062) 605-1112,1023
www.kwangshin.co.kr